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시장경제와 사회통합
발제자: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 시: 2017년 04월 13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 251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04월 13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연사로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세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청년들의 절망감을 나타낸다.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많다.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저(低)성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로 인해 발생한다.

■ 갈등이 많은 사회는 발전이 더디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자원과 에너지가 비생산적인 정치활동에 쓰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통합의 핵심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작용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 가능한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구매자와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판매자의 욕구는 시장가격에 의해 충족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개인의 선택이 보장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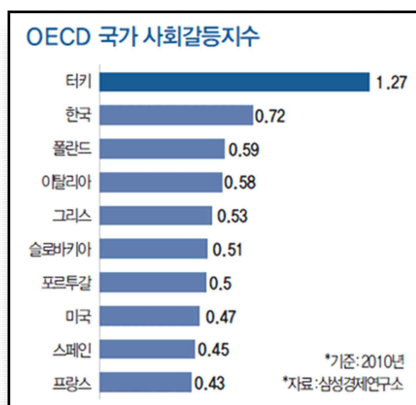
■ 정부개입은 한국 사회갈등 심화의 주원인이다. 정부가 경제적·사회적 관계에 개입할수록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지원을 하면 지역갈등이 심화된다. 정부가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비정규직의 원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생산성이 낮고 성과가 없는 정규직마저 포용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개입이 과도해지면 개인의 선택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일부 구성원이 정부의 힘을 악용하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갈등이 적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유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극빈 노인층 등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가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정부는 건실한 사회 안전망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인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경제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이 갖는 자기책임 원칙을 믿어야 한다. 정부구조 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과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 심각하다.

: 계층·세대갈등 원인은 청년 실업문제 등 다양

- 사회통합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결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갈등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갈등이 특히 심각하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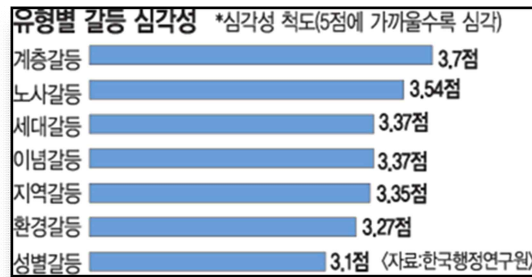
OECD 국가 사회갈등지수
(한국, 2위)



[그림 2]

OECD 국가 사회갈등지수
(한국, 5위)

-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세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청년들의 절망감을 나타낸다.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많다. OECD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니트족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 15%보다 3.5% 높은 1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저(低)성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로 인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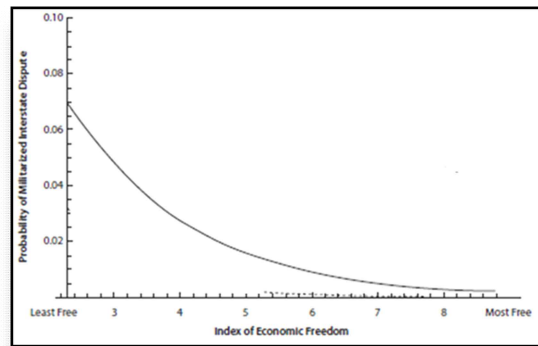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사회 유형별 갈등 심각성

■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한다.

: 사회의 안정과 발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 갈등이 많은 사회는 발전이 더디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자원과 에너지가 비생산적인 정치활동에 쓰이기 때문이다. 2015년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한다. 한국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통합의 핵심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이를 수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작용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 가능한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구매자와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판매자의 욕구는 시장가격에 의해 충족된다.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면 개인의 선택이 보장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는 나폴레옹 전쟁 후인 181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이였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전성기였다. 자유주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자발적 거래가 쌍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호존중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남의 것’을 쟁탈하는 정복과 전쟁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 아래 [그림 4]를 살펴보면 경제 자유가 보장될수록 인접 국가 간 군사적 갈등이 적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도 ‘돈의 힘’에 의해 교환 활동이 활성화되면 전쟁이 줄어든다고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사회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사상을 대체하면서 제1·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이러한 사상들은



[그림 4] 경제적 자유가 국가 간 군사적 갈등에 미치는 효과 (출처: Erik Gartzke "Economic Freedom and Peac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 P. 35.)

국가 vs 국가, 부자 vs 빈자, 지배자 vs 피지배자로 사회적 관계를 구분하며 투쟁을 끊임없이 부추겼다.

■ 한국 사회갈등 심화의 주원인은 정부개입

: 정부구조 개혁과 ·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과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구축해야

- 정부개입은 한국 사회갈등 심화의 주원인이다. 정부가 경제적·사회적 관계에 개입할 수록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지원을 하면 지역 갈등이 심화된다. 정부가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비정규직의 원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생산성이 낮고 성과가 없는 정규직마저 포용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세종시 문제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부 개입이, 이해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을 양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 정부개입이 과도해지면 개인의 선택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일부 구성원이 정부의 힘을 악용하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보상받기보다 정부로부터 특권을 얻으려한다면 시민의식이 결여되고 부정부패와 이권투구가 증가하게 된다.
- ‘갈등이 적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극빈 노인층 등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가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만큼 정부는 건실한 사회 안전망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인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IMF 시절부터 정부 규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강화되었다. 동시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다. 그렇다면 역동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시장경제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이 갖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믿어야 한다. 정부구조 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과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제 251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사회갈등 해소만으로 오늘날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문제와 저(低)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답변 경제현상은 스냅샷(Snapshot)으로 보아선 안된다. 시간에 걸쳐 흐르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사태 이후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학파는 금융기관의 탐욕과 시장실패를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본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가 시행한 저금리 정책에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정부지원금이 높아지면서 좀비기업을 청산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부터 경제성장률이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우선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질문2 산업이 부흥하면서 나타난 많은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였다. 오늘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심판자’ 입장에서의 개입이었다. 정부의 개입만을 비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답변 시대적 상황을 하나의 스냅샷으로 보면 자본주의 문제가 바로 드러난다. 그 전 시대를 살펴보면 더 심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문제들이 점차 완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미국 정부가 신용도가 낮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만들었다. 투자은행은 부도가 날 채권이란 것을 알지만 정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모기지를 사들였다. 상업은행은 반대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보증해주지 못한 투자은행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이는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회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질문3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친(親)기업적 자유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가?

답변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소득격차 문제도 해소된다. 우선 계층 간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층 실업자가 많을 경우 소득 격차 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정

부 개입이 많은 사회는 자원배분이 연줄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득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소득불평등은 정태적 개념으로 한 시점의 지니계수로 볼 수 있다. 지난 20년 간 사회 구성원이 달라졌는데 20년 전과 오늘날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부익부빈익빈은 동태적 개념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